

이재명 대통령, 美구금사태에 "큰 책임감 느껴" 부당한 일 재발 않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민석 국무총리. 2025.9.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의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깊은 위로의 말씀...긴밀한 협의로 합리적 제도개선 신속히 추진

노조자녀 특채는 불공정의 대명사...勞측 자제해야"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계부처는 모든 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상황을 계속해서 세심하게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동맹 정신에 따라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李대통령 "노조자녀 특채는 불공정의 대명사...勞측 자제해야" 이 대통령은 9일 "극히 일부의 사례라고 믿지만, 최근 노동조합원의 자녀에게 우선채용권을

부여하려고 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됐다는 보도를 봤다"며 "노조의 이런 행동은 불공정의 대명사 아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힘이 있다고 해서 현직 노조원의 자녀를 특채하는 규정을 만든다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 이 공정한 경쟁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취업 시장은 어느 분야보다도 투명한 경쟁이 필수"라고 밝혔다.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은 양측 모두 국민경제의 중요한 축"이라며 "임금 체불이나 소홀한 안전 관리 등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이런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줄 것을 다시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경제의 필수조건인 민생 안정을 위해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일전에 당부드린 대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민생경제 회복에 탄력이 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책을 수립해달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은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경제 전체가 과실을 나눠야 가능하다."

성장의 마중물인 국민성장펀드의 차질 없는 출범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채봉 기자

與, 더 센 특검법 수정 가능성 시사... "전향적 자세로 野와 논의"

여야 원내대표, 특검법·금감위법 논의...내일 재회동해 추가 조율

與 "정부조직 조기개편해 새정부 일할 환경 조성"...野에 협조 '손짓'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이른바 '더 센 특검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광규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주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오늘 오전 헌재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광 의원은 "일정상 이번 주 안으로 3개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신속하게 가처분 사건과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심리와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안은 3대 특검의 무기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간사 선임에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법사위의) 불법적 의결로 처리된 법안"이라고 가처분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나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내정했지만 아직 법사위에서 간사 선임 안전이 상정되지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이 지난 4일 법사위에서 여야 간사 합의 없이 형식적인 안전조정위원회를 거쳐 '더 센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사유를 들어 소속 추미에 법사위원장이 법안 처리 과정

중 절차를 위반했다며 전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더 센 특검법은 3대 특검(내란·김진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 반에 녹화 중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9일 강경파를 중심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전날 회동에서 협치를 다짐한 가운데 이번 달 말 정부조직법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얻기 위해 야당과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총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3대 특검법(내란·김진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검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처리의 시급성과 함께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부위에서의 금융감독위 설치법 논의 문제 등을 언급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3대 특검법안에 대한 수정 문제를 놓고 충분히 논의했으며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놓고 야당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야 대표가 당내 의견 수렴 뒤 10일 재회동기로 했으며 "민약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게 되면 수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비서실장은 "현안인 특검법 개정안의 내용이 많은데, 다행히 논점들을 충분히 짚었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조직법과 관련,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으며, 박 비서실장은 "여당이 급격히 추진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서도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국회 정부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르면 11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거론됐던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정부조직법 등 다른 사안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당정은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에 나서면서 기존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

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도 설치된다.

이런 조직 개편안이 현실화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의 국회 통과가 필수인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부위원회에서의 합의 처리가 첫 관문이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날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가 각각 다소 한 발씩 물러난 모양새를 보이며 대에 대해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났다. 여야가 서로 양보하며 협치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게 대통령의 취지"라며 "저희는 정부 조직을 빨리 개편해서 새로운 정부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뒷받침해야 하므로 전향적인 자세로 야당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비서실장은 "특검법의 경우 의견 차이가 굉장히 첨예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고, 이런 기회가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심귀영 기자

